

전국시·도의회의장協 2007 제2차 정책자문위 개최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광역의회 보좌관제 도입 관철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국의 정치학·법학·행정학 전공의 대학 교수 및 책임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의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영천 서울시립대 교수)는 10월 5일(금) 오전 11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서울·대구·광주·울산·전북 등 각 지역대학의 교수 및 책임연구원 9명이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의 독립방안들을 내놓았다.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방안’과 지방의원 보수의 외국사례와 월정수당 수준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순은(동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 위원은 “의회사무처(국)의 인사

권 독립문제는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임명직 지방정부의 장과 선출직 지방의회라는 기관분리형의 형태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강시장-약의회’의 형태가 되었다”고 현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에 관한 실태와 대책’을 발표한 최봉기(계명대 행정학교 교수) 교수는 “현재 지방의회의 모든 조례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조례”라며 “사무처장에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결국 사무처장 또한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사무처 인사권의 부분적인 독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방자치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문제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집행부 견제와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논리를 개발,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관 의장은 회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전에서 열린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는 현행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로써 향후 지방협의회가 대처

해 나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자문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보고된 후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시의회 싱크탱크(THINK TANK) 의정자문위 역할 기대

-10.30 시의회 대회의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창립회의-

최근 지방의회가 의원유급제, 보좌관제 등의 도입에 따른 ‘정책의회’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시의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김영관 의장)는 시의회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전문자문기구 의정자문위원회를 출범, 위원 위촉 및 창립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10월 30일 창립회의를 갖고 정식 출범하는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제 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전광

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10월 5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문에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자문기구로서의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위촉을 받는 위원 18인은 분야별 지역전문가로서 운영위원회 3명, 행정자치위원회 5명, 교육사회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으로 지역대학 교수(경제학·체육학·행정학·임/조림학·정보관리학·사회복지학·부동산정책) 및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향후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상임위원회별 간담회·좌담회 등 수시자문을 통한 의정 혁신정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영관 의장은 “국회의원은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지만 지방의원이 개별적으로 보좌관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일이 미비한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식·전문화시대에 전문화를 추구하는 지방행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의회가 정책의회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가동

- 박수범 의원을 중심으로 총 7인 구성 운영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그동안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 노선과 로봇랜드 조성 예비사업자 선정에서 쓴 고배를 마시자 의회차원에서 의 추진의지 표명 등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이 제1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위원장 1, 부위원장 2, 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산업건설위원인 박수범(대덕구 제2선거구)을, 부위원장에는 박희진 위원(대덕구 제1선거구)을, 그리고 위원으로 전병배 위원(중구 제2선거구), 김재정 위원(서구 제1선거구), 광영교 위원(서구 제2선거구), 김학원 위원(서구 제3선거구), 이정희 위원(한나라당 비례 대표)로 활동기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주 역할은 대덕특구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추진은 내년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첨단의료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 통과되면 ▲ 2037년까지 5조 6천억원의 예산투입 ▲ 82조 2천억원의 생산증가 ▲ 38만2천명의 고용창출 과 의료산업 확산 등 천문학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수범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국책사업 유치를 실패해 대전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 게 사실이다”면서 “그동안 유치실패에 따른 문제점 등을 재점검해, 이번엔 반드시 대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해 그동안 실추된 대전광역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